

검찰 '검언유착 의혹' 누구부터 부를까

제보자 출처거부...채널A·MBC 기자 조사 수순 강제수사 대신 관련자 조사·임의제출 자료부터

종편합성채널 채널A 기자와 현직 검사장 간 유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이 사건 고소·고발인을 조사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해당 기자와 통화한 상대가 누군지, 현직 검사일 경우 '협박 취재'에 실제 개입했는지, 의혹 관련 MBC 보도에 신빙성이 있는지가 규명 대상에 오른 가운데 다음 소환 대상에도 관심이 쏠린다.

22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정진웅)는

전날(21일) 오전엔 김서중 민주언론시민연합 상임대표를 고발인 신분으로, 오후엔 신라젠 투자이력을 보도한 MBC 관계자 등을 고소한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측을 각각 불러 조사했다.

현재 검찰은 강제수사보다는 피고소·고발인, 참고인 등 사건관계자 조사와 임의제출을 통한 자료 확보에 무게를 두고 있다.

소환 대상자로는 채널A 해당 기자와 MBC에 이 의혹을 제보한 지모씨, MBC 취재진 등이 있다. 민

연련은 채널A 간부 등 '윗선'이 취재 과정에 관여했는지도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검찰 관계자는 소환조사 순서에 관해 "당연히 고민할 것"이라며 "필요한 사람은 계속 나오라고 연락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검찰은 전날 지씨에게 참고인 신분 출석을 요청했으나 지씨가 응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해당 의혹 진상을 자체조사한 대검찰청 인권부는 채널A와 MBC에 녹음파일 원본과 녹취록 전문 등을 요청했으나 받지 못해 해당 검사장이 누구이며 비위 혐의는 무엇인지 확인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같은 중간 결과를 보고받고 대검 차원 조사

하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 지난 17일 서울중앙지검에 조사를 지시하며 정식 수사로 전환하도록 했다.

채널A는 지난 9일 방송통신위원회 의견청취 자리에서 해당 기자 노트북은 외부 업체에 의뢰해서, 휴대전화는 내부에서 조사하는 등 자체 진상조사를 했다고 밝힌 바 있다. 검찰은 일단 채널A를 상대로 이 자료를 확보하고 사건 관련자들 통화기록 등을 확인하는데 주력할 것으로 관측된다.

민연련은 채널A 기자가 신라젠 대주주였던 이철 전 배류인베스트 코리아 대표 대리인에게 가족 수사 가능성을 언급한 것이 협박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해당 기자와 현직 검사장을 지난 7일 고발했다.



동물을 살리는 채식 지구의 날인 22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비건(Vegan)'을 지향하는 모든 사람들 주최로 열린 채식을 촉구하는 행사에서 참석자들이 육식 중단과 채식을 촉구하는 손팻말을 들고 있다. 이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뿐 아니라 사스, 메르스 등 신종 바이러스 감염병이 동물을 착취하고 도살, 사용하는 과정에서 생겼다고 주장하며 육식 중단과 채식을 촉구했다.

"5월6일부터 회식해도 되나요?" "이전으로 돌아가기 어려워"...생활방역수칙 최종안 예정

지난 19일 정부가 한 단계 강도를 낮춘 사회적 거리두기를 다음 달 5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힌 가운데 5월6일 이후의 삶에 대한 궁금증이 늘고 있다.

방역당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이제 대신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며 국민 의견을 수렴해 생활방역수칙

최종안 만들기에 나섰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와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은 40여종으로 구성된 생활방역수칙 초안을 22일 공개했다. 국민이 먹고 마시며 공부하고 일하는 모든 일상에 관한 내용을 담았다.

보건복지부의 '생활방역지침안'을 보면 당분간 회식은 권장하

지 않는다. '식당과 카페' 수칙은 마주 보지 않고 한 방향으로 앉기, 가능한 경우 포장과 배달 주문 이용하기, 음식은 개인 접시에 덜어 먹을 것을 권고하고 있다. 사무실 또한 개인위생을 강조하며 회의는 화상 시스템이나 전화를 이용할 것을 권장했다.

방역당국이 설문 조사 중인 '개인방역 5대 핵심수칙'에서도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두 팔 간격으로 충분한 간격을 두라고 권고하고 있다. 환기가 안 되는 밀폐된 공간 또는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은 되도록 가지 않을 것을 권고하고 있다.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될 때도 정부가 회식이나 개인 활동에 대한 법적 강제성을 두진 않았다. 특히 식당, 카페 등은 애초에 밀집 시설에서 제외됐었다.

일각에선 아직 방심할 때가 아니라며 사회적 거리두기 강도가 완화된 이후에도 기본적인 방역지침은 지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전문가들 역시 코로나19의 전파력이 매우 크고 무증상 감염사례 또한 지속해서 나오는 만큼 사회적 거리두기를 넘어 생활 속 거리두기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NDP

인쇄전문기업

(주)남도프린테크

광주광역시 광산구 평동로 803번안길 93-10
TEL : 062)943-0135 ~ 6
FAX : 062)943-0134

◆ 단신 ◆

'n번방' 영상 수집해 판매한 고교생 5명 검거

텔레그램 'n번방' 등에서 유포된 아동·성착취 영상물을 수집한 뒤 대화방을 개설하고 등급을 나눠 영상물을 판매한 고교생 5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강원지방경찰청은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판매) 혐의로 5명을 검거하고 그 중 주범인 고등학생 1학년 A군(16) 등 2명을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중학교 동창인 A군 등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수집하고 다시 텔레그램을 통해 판매해 약 3500만원의 범죄 수익을 챙긴 혐의다.

이들은 '박사방' 조주빈처럼 텔레그램 대화방을 만든 뒤 영상물의 수에 따라 방을 3개 등급을 나눠 입장료를 받는 수법으로 1만5000개의 성착취 영상물을 판매했다.

이들이 판매한 영상물은 갖가지 만든 'n번방' 등에서 유포된 것으로 추정되는 아동·성착취 영상물이다.

경찰은 이들의 연령은 낮으나 범행수법, 범죄수익 규모를 고려하고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주범 2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경찰은 갖가지로부터 'n번방'을 물려받은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켈리' 신모씨(32)로부터 성착취 영상물을 구매한 78명을 입건했다.

경찰은 앞으로도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 판매, 구매, 소지 등 관련된 일체의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히 단속할 방침이다.

"도박으로 돈 잃어서" 50대女 뒤쫓아가 폭행 40대

광주 북부경찰서는 귀가하는 50대 여성을 협박하고 폭행한 혐의(상해 등)로 A씨(46)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4일 오전 2시30분쯤 광주 북구 두암동 한 골목길에서 50대 여성을 넘어뜨리고 주먹을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여성은 전치 2주 진단을 받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A씨는 피해 여성의 뒤를 100m가량 쫓아가 입을 막은 뒤 '소리치면 죽인다'고 협박, 여성이 저항하자 A씨는 주먹을 휘두르고 달아났다.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전남지역에서 A씨를 붙잡았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도박을 하다가 현금 200만원을 모두 잃어 화끈에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가 피해 여성에게 금품을 빼앗으려거나 성범죄를 저지르려했을 가능성을 보고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뺑소니 차에 치인 고물수집상, 4일만에 숨져

순수레를 이용해 고물을 쫓던 남성을 승용차로 치어 숨지게 한 뒤 달아난 20대 뺑소니범이 경찰에 붙잡혔다.

강원 철원경찰서는 특정범죄 기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혐의로 A씨(26)를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일 오전 5시 20분쯤 철원군 갈말읍 도로변에서 고물을 수집하던 B씨(59)를 차로 치어 숨지게 하고 달아난 혐의다.

사고를 인지한 A씨는 차에서 내려 사고 현장을 둘러본 뒤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떠났다.

4일 뒤 혼자 사는 B씨는 사고 장소로부터 약 600m 떨어진 자신의 집에서 이웃 주민에게 숨진 채로 발견됐다. B씨는 사고 직후 1시간 가량 도로에 방치돼 있다가 자신이 끌고 다니던 순수레에 의지해 집으로 간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신체에 외력을 가한 다발성 골절 등에 의해 숨졌다는 국과수의 의견을 토대로 주변 탐문 및 CCTV 수사를 통해 교통사고 흔적을 확인하고 차량을 추적해 A씨를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사고 직후 112나 119신고를 하는 등 구호조치를 했다면 피해자가 사망하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